

**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위상 · 배준영  
박충권 · 송석준 · 고동진  
정동만 · 박성훈 · 김정재  
안철수 의원(10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.

그런데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주민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동물장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그 결과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하는 경우,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설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

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이를 통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,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설치·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금 설치 및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~ ⑦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금 설치 및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.</u>